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동영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이 윤과를 드려 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엊그제 '5+2 광역경제권'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전국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충청권(대전·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5개 권역으로 묶고 강원권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해 개발한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은 초광역개발권으로 연결된다. 남해안 선벨트와 서해안 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휴양선 인근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등이 그것이다. 참여정부 지방정책의 키워드가 '균형·혁신·분산'이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상생·경쟁·분권'이라 할 수 있다.

윤과 드러낸 새 지방정책

이 구상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행정구역에 얹어매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배정해 사업이 중복되고 효율도 떨어져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국을 광역권으로 개발해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간의 경쟁과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현실이다.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으면 수도권은 광역경제권 중의 하나가 되고 비수도권은 시장논리에 따라 수도권 및 다른 광역경제권과 경쟁을 벌

정부 '지방 살리기' 의지 있나

여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간접자본과 기술 등 모든 조건에서 열악한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경쟁하고 협력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다. 사람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겨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시킬 뿐이다.

광역경제권의 불균형도 문제다. 영남은 부경권과 동남권 등 2개의 축을 형성하는 반면 호남은 광주와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호남권 한 곳에 불과하다. 왜 호남이 지역정책에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납

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호남권에는 경제·생활권이 광주·전남과는 다른 전북까지 포함돼 있어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없다. 벌써부터 J프로젝트의 상당부분이 전북의 새만금사업과 중복돼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같은 권역에서 전남과 전북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의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광역경제권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도 없이 경쟁과 상생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무책임하다. '공통'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광역경제권을 구축하

반응은 싸늘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광역경제권 등과 같이 우리나라 지도에 줄을 긋는 것으로 균형발전이 되겠느냐"며 "정부의 정책을 보면 무슨 방법으로 지방을 살리려는지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혹평했다.

혁신도시 차질 없어야

위원회 의원은 "혁신도시 문제가 '지방 반란'의 본격적인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한구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관련, 정부가 대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집권 여당이 이 정도인데 야당이나 비수도권의 반응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 정부에 지방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지방을 기만해선 안 된다. 아무리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부라 해도 과거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뒤집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없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립하고 있는 마당에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우선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비수도권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정부는 지방의 '밥란'이 현실화되기 전에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논설장> dykim@kwangju.co.kr

시설

막가는 광주시의회 어디까지 추락할 건가

최근 광주시의회의 행태를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폐거리 자리나 투목으로 주마다 짐을 하고, 급기야 성폭행 논란으로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는 의원을 시민보다 소속 정당,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먼저 생각한다. 당장의 공천 여부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9명의 시의원 가운데 18명을 득표한 기현상이 바로 그 증거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질이나 능력있는 인물보다는 자신의 촉근을 공천하는데 급급했다. 물론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가 가능했던 배경은 유권자들의 '묻지마 투표' 행태다.

시의회는 활활 타파해야 한다.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국에 달했다. 시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추태를 뒤풀이한다면 유권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공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민주당도 명심해야 한다.

광양항 개항 10년 활성화대책 서둘러야

광양항이 내일 개항 10년을 맞는다. 1998년 개장한 광양항은 4선석으로 출발했지만 10년 만에 16선석을 운영하는 대형 항만으로 발돋움했다.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하브항만으로 자리 잡으려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 추세는 매우 가파르다. 지난해 172만 TEU를 처리해 개항 당시에 비해 50배 늘어났고 올해는 195만 TEU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물동량 신장률이 12.4%에 달하고 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올 하반기에 5선석을 추가 착공하는 등 2020년까지 25선석을 갖출 계획이다.

기항국가도 다변화되고 있다. 개항 초기 중국, 동남아가 주 향로였지만 미국과 유럽, 중동, 남미 등으로 다양해졌다. 물동량 창출이 기항국가의 다변화를 놓고 다변화가 물동량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부산항에 비교하면 조리하지 짱이 없다. 광양항은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비롯 기업의 물류시스템, 선사들의 선박운영 방식 등에서 부산항과 비교할 수 없다.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당시 부산항은 90%를 넘는 장치율을 기록했지만 광양항은 30%대에 그쳤다.

광양항이 기업과 선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양항체제(Two Port System)로 육성키로 했지만 슬그머니 백지화하고 말았다. 광양항의 경쟁력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광양항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광양항은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항만은 물론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동북아지역 항만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물류시스템 개선 등 활성화 대책 없이는 동북아 하브항만은 혀구호일 뿐이다.

無等鼓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데도 에너지 소비가 여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정부는 이 같은 물동에 대한 답으로 큰 차와 넓은 집, 대형 가전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엄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모습'을 발표했다. 우선 유동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소비 증가가 대형 가전과 중형차를 선호하는 소비행태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1975년 에너지 소비와 국내총생산(GDP)을 100으로 놓으면 2006년 에너지 소비는 740, GDP는 760으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차량을 포함한

7%로 뛰는 등 큰 것, 비싼 것 위주로 가전 제품 시장이 재편됐다는 얘기다. 1인당 주거 면적이 1985년 11.3㎡에서 2005년 22.8㎡로 늘어난 것도

가정의 기본적인에너지 소비 규모에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에너지요금의 경우 1990년 이후 휘발유 가격이 4배, 경유가 8배 올랐음에도 전기요금은 16년 새 40% 가량 오른다.

정부는 이 같은 수송분야 에너지 과소비의 원인으로 최근 10년 새 급증한 중대형 차량을 꼽았다. 2000cc 이상 중대형 승용차 시장점유율이 1995년 10%에서 2000년 17.7%, 2002년 34%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컬러의 시대

몸은 아직 있지만 사진정도는 얼마든지 과거로 돌아가 그 때 그 순간을 바꾸어 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왜 장황하게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꿨습니다'라는 광고가 눈에 띠어 발걸음을 멈추었다. 근엄하신 어르신께서는 영정사진으로 찍으셨는지 빛바랜 흑백사진 속에서 세월을 견뎌서 그 때 그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계셨는데, 바로 옆에는 똑같은 사진이 온갖 컬러에 채색되어 밤금 전에 찍은 것 같은 컬러 사진으로 탈바꿈 되어 있었다. 아주

초보적인 탐험마신의 단계인 듯싶었다.

컬러의 시대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온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외국인과의 결혼이 이제 더 이상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국력을 넓히는 기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광주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더 다민족·다인종·다문화가 긍정적으로 어울림이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도시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약사·2005년 12월 수상자>

온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온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에어컨 온도 1℃ 내려 에너지 절약 실천을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초고유가 현상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충격이다.

석유나 석탄 등 1차 에너지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전기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21일 기록한 최대 수요전력이 올해에는 한 달이나 앞선 지난 9월에 기록됐다. 이런 기록은 고온 다습한 날씨 영향도 있겠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로 소비가 몰리는 현상이기도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방 등에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하는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비용과 효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기가 대체소비재인 셈이다.

최근 1년간 석유제품 이용 비용과 전기요금 간 가격차 때문에 발생한 대체소비량 추정치는 전체 전력소비량의 3.7% 가량인 1억3천54만 kWh 정도다. 이 만큼의 전력을

전기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7천359억 원인데 같은 에너지량을 석유제품으로 생산할 경우 8천125억원으로 충분해 그 차액인 9천23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넓게 보면 국가경제의 짐이 된다.

전기요금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해 경제에 고통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한쪽으로 쓸리는 에너지 소비 구조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고, 국가경제의 주름이 느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우리 모두가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불감증을 털어야 한다.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코드를 뽑고, 에어컨의 설정온도를 1℃ 높이고, 디ップ질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미덕이야말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3차 오일쇼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안선찬·한국전력 전남본부 과장

광주 U대회 재도전하자

오갔다. 하지만 그것이 저마다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평가였음은 분명했다.

결국 시민들의 뜻을 모아 2015년 대회에 재도전자는 의견이었지만 유치 효과에 대해 생산과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그 수치가 맞는지, 틀린지 따지는데에 집착하는 건 아쉬웠다. 토론험 중 한 명이 말한 것처럼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광주의 세계화라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실패는 결과만 보면 실패지만 과정 면에서는 광주가 큰 도시로 나아가는 귀중한 단초가 되지 않았나 하고 반문해 본다. 대구에서는 온 토론의 말처럼 유치 효과가 없다면 왜 세계의 유수 도시들이 U대회를 유치하려 하겠는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국력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의 모든 도시들은

<전남대 경영학부 4년>

KTX안에서 딸아이 돌봐준 女한의사 정말 고마워

며칠 전 KTX를 타고 서울에 갈 일이 있었다. KTX안에서 딸 아이가 제쳤는지 갑자기 얼굴이 착백해지면서 심하게 울었다. 아침 식사를 한 것이 체한 듯했는데 KTX안이라는 딸에게 딸려온 짓이었다. 딸은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의사에게는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워 객차와 객차 사이의 통로로 데리고 나갔더니 한 젊은 여성 승객이 딸과 함께는 자신은 한의사이며 아이를 좀 보겠다며 도와주었다.

그리고 마침 가지고 있는 소화제가 있다며 먹여주고 엄지 손가락을 따주었다. 또 걸치고 있던 솔을 벗어 바닥에 깔고는 아이를 눕힌 뒤 등과 팔을 마사지해주었는데 10분쯤 지나자 아이가 큰 트립을 몇 번이나 하더니 읊을을 그쳤다.

▲오미영·목포시 해안동

홍민호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일이다.

비록 우리는 기쁨의 눈물이 아닌 아쉬움과 비통함의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광주시민 모두 함께했던 그리고 하나님 되었던 '우리'가 흘린 눈물이었기에 의미가 있었고 아름다웠다.

또한 이 실패를 통해 광주가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과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이 세계무대에서 얼마나 경쟁적인지, 도시발전

한국인의 '엄보'

1%, 2006년 29.8%로 높게 유지되면서 에너지 절약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가정의 에너지 소비 증가도 주거면적 증가와 대형 가전 선호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25인치 이상 컬러 TV 시장점유율이 1995년 26.7%에서 2006년 65.7%로 높아졌고 500ℓ 이상 냉장고가 1995년 14%에서 2006년 66%

7%로 뛰는 등 큰 것, 비싼 것 위주로 가전 제품 시장이 재편됐다는 얘기다. 1인당 주거 면적이 1985년 11.3㎡에서 2005년 22.8㎡로 늘어난 것도

가정의 기본적인 에너지 소비 규모에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수송용 에너지 소비는 100에서 1580으로 무려 15.8배나 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수송분야 에너지 과소비의 원인으로 최근 10년 새 급증한 중대형 차량을 꼽았다. 2000cc 이상 중대형 승용차 시장점유율이 1995년 10%에서 2000년 17.7%, 2002년 34%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榮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 www.kwangju.co.kr